

문화대혁명의 역설과 시진핑 시대

조경란(연세대 국학연구원)

중국공산당의 당면 목표는 2020년까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이고 1949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이다.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00주년이다. 이를 두 개의 백년이라고 한다. 시진핑 정부에서 현대화 국가건설을 위해 내건 두가지 프로젝트가 바로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이다. 이는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미 ‘천하질서’의 신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두가지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해 당,정,군 3위일체를 토대로 한 강력한 영도력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해온 시진핑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 파워엘리트들이 현 정국을 설명하는 일반 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지금 당장은 중국 내부 뿐만이 아니라 외부도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좀더 긴 역사 속으로 들어가 있을 법한 중국내부의 ‘사정’이나 ‘고민’을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다. 우선 중국은 규모와 성격에서 14개국을 인접한 거대한 판도와 다양한 에스닉으로 구성된 이른바 ‘제국적 국민국가’이다.¹⁾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 20세기에 진입한 이래 중국 파워엘리트들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중국의 현단계 최대 고민이 무엇일까. 이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고민은 사회주의 30년, 개혁개방 40년이 된 지금, 부와 강 사이의 딜레마에서 오는 ‘정치 통합성’ 또는 ‘국가적 일체성’의 약화이다. 여기서 부를 근대화 또는 경제로, 강을 정치 통합성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은 ‘정치 통합성’이 약화되면 ‘지배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중국의 긴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먼저 부자가 되라’는 구호 아래 시작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40년 동안 부는 괄목상대하게 성공했지만 그 부작용이 국가적 차원의 통합성을 해칠 정도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21세기 중국공산당이 당면한 과제는 지나친 부의 편재로 인해 중국 전체가 대일통의 강함을 유지해나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불식시키는

1) 현재의 중국을 사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국의 메카니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점이 고려되지 않은 순수한 관념사는 중국의 현실을 이탈했기에 객관적인 연구라 할 수 없다.

것이다. 즉 부와 강, 경제와 정치가 조화를 이루어 지배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시진핑의 등장은 위와 같이 국가 통합성의 강화(強)라는 필요성에 의해 공산당 지도체제 내부, 즉 원로 정치인과 파워엘리트 사이의 모종의 ‘합의’와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설이 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는 호불호를 떠나 중국의 역사에 내재해있는 고유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기 중국사의 동학(動學) 속에서 보면 부와 강의 딜레마가 반복되어왔다. 부와 강의 교체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온 하나의 규칙과 같은 것이었다. 부와 강은 서로 조화를 보일 때가 가장 좋지만 역사에서 그런 경우는 매우 짧았으며 양자가 모순적 관계일 때가 훨씬 많았다. 이번 헌법개정도 긴 역사 속에서 본다면 부와 강의 딜레마 속에서 나온 공여지책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사에서 부와 강의 반복은 문혁으로 인해 좀 더 극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문혁이 극단적 비극이라면 개혁개방은 극단적 희극이었다. 개혁개방의 희극은 문혁의 비극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 문혁 전문가 로드릭 맥파커에 의하면 문혁의 극심한 트라우마가 이후 중국의 극단적 형태의 개혁개방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방기해야 할 정도의 극단적 형태의 개혁개방을 초래했다. 문혁과 같은 극심한 혼란과 살육이 없었다면 개혁도 개방도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야말로 문혁의 역설이다.

사실상 문화대혁명 기간 직접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혁명원로들이나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란 2세대들에게 문혁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원로들로서는 장밋빛 중국의 미래보다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에 훨씬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는 문혁같은 비극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아픈 ‘교훈’이 이들에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했고 더 나아가서 1989년 6.4 진압을 감행하게 하였다. 문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이들의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이 트라우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맥파커의 연구를 좀더 소개하자면 그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철의 삼각으로 움직여졌다고 본다. 철의 삼각이란 관료, 유교사상, 군대이다. 이 엄격한 삼각의 시스템이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관료제도를 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05년 과거제 폐지로 삼각의 두변이 무너졌다. 인민공화국 성립으로 다시 공

산당 간부가 옛날 유자관료보다 훨씬 조직화되고 규율화되었다. 맑스 레닌주의와 마오사상이 유교를 대신하여 이데올로기 부분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홍군을 토대로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졌다.(당관료, 맑스주의, 인민해방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구조는 40년 전에 붕괴된 전통 시기의 황제제도와 유사해졌다. 마오주석의 언어는 근대적 통신수단을 통해 전국에 전해졌고 어느 황제의 언어보다 강력해졌다. 모택동의 명령을 실행하는 공산당 간부단은 옛유자들의 관리보다 훨씬 조직화되고 규율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농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되었다. 당간부는 맑스 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지식으로 통치자격을 얻었고 인민통치의 지침이 되는 이데올로기는 유교법제도보다 훨씬 고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통치하는 데 성가신 것이 있으면 곧바로 억압해버리는 인민해방군이 있었다. 더 강력한 철의 삼각이 구축된 것이다.

문혁시 당과 당간부에 대한 파괴는 기근 이상으로 괴멸적이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등소평과 혁명원로들은 중국의 근대화를 다시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해결책으로서 사실상 맑스주의를 방기하고 개혁개방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극단적 처방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철의 삼각의 약체화 또는 와해를 초래했다. 마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했지만 관료주의를 파괴하고 당은 그 권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평등주의적 혁명국가의 수립이라고 하는 모택동의 꿈을 포기하고 등소평은 근대화를 모색하고 이데올로기를 버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패 또한 문화대혁명의 직접 결과이다. 1950-60년대 당원을 향한 슬로건은 “인민에게 봉사하자”였다. 하지만 인민에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간부는 문혁 중에 모택동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 구타당하고 살해당했다. 문혁후 등소평이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걸었던 슬로건의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것은 멋있다’였다. 그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부패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문제 없다”였다. 이처럼 최근 시진핑 2기 정부의 헌법개정이 간접적으로 부의 편재와 부패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혁이 일어난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은 문혁의 자장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 이론가 새뮤얼 헌팅턴()은 20년 전에 중국의 제국으로서의 위력을 이렇게 예측했다. “새로운 패권국의 출현은 늘 불안을 야기하지만 중국이

패권국으로 떠오를 경우 그것은 1500년 이후 세계 역사에 등장한 모든 패권국들을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헌팅턴이 기존의 패권국을 초라하게 만들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발전의 지속’(富)과 ‘정치 통합성의 유지’(強)였다. 따지고 보면 ‘신시대’의 ‘현대문명사회 건설’을 내건 시진핑 2기의 야심찬 출발은 이 두가지 중에서 적어도 경제발전(부)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다.

이 ‘성공’은 심각한 빈부격차라는 독을 품은 성공이었다. 중국 속담에 “모든 약에는 독이 30%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 해독을 위한 약처방을 하지 않으면 먼저 약을 먹어 고쳐진 부분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힘들다. 부의 편재를 교정하지 않는 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強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부와 강이 상호보완적이 되게 해야 하고 그럴 때 안정된 사회가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축적된 부가 효율적이면서 적절히 분배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하지만 덩샤오핑 이래 사회주의적 가치가 시장경제로 대체되었고 사회주의적 도덕은 문혁의 충격 때문에라도 더 이상 중국사회에서 먹히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한 결과 사회는 이완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통합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빈부격차를 낳았다. 이 상태에서 사실상 정치적 통합성의 유지는 군과 공안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존하여 유지된 지 오래이다. 중국사회는 이미 많은 부분 다원화되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화가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선택한다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 중국이 1990년대 이후 반면교사는 러시아의 케이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